

##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 마련 촉구 시민사회 성명문

최근 여야 원내지도부와 기획재정부 모두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성을 강조한 제도가 있다. 바로 해상풍력 계획입지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어 국민의힘은 27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발표한 기후공약을 통해 무탄소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선정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계획을 밝혔다. 기재부는 '2024 경제정책방향' 안에 에너지 탈탄소화와 무탄소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특별법 입법 추진' 내용을 명시한 바 있다.

해상풍력 계획입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인 '해상풍력특별법'은 21년 5월 발의된 풍력발전보급 촉진특별법안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법안 소위에서 논의된 횟수만 12번이며 수많은 토론회를 진행하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상당 수준 이뤄진 법안이다.

그럼에도 현재 21대 국회에서 여전히 법안 소위 단계에 머물러 있어, 4월 10일 총선 이후 새롭게 구성될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이에 기후변화청년단체, 기후솔루션, 빅웨이브, 턴테이블을 포함한 기후·청년단체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 성과가 후진적인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의 부재와 미흡한 이해관계자 참여 절차를 모두 해소할 수 있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 마련은 22대 국회가 아닌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제임을 강조하며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가 21대 국회에서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 도입은 미루면 미룰수록, 현장에서의 혼란은 가중되고 필요한 제도 도입은 더욱 어려워진다. 해양공간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인 공유수면은 공공의 이익에 제공되는 수면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유수면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규정한 제도는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공유수면이용자는 늘어나다 보니 이해관계자 간 갈등은 심화되었다. 해상풍력 계획입지, 해양공간법제의 필요성은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반영한 요구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지연은 갈등의 방치와 다름없다.

둘째, 오랜 논의를 거쳐 지금의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법안을 버리고 새로 입법할 경우 수많은 이해관계자와의 합의와 부처 간 협의가 다시 이뤄지는 과정에서 또다시 법제화까지 수년의 기간이 걸릴 수 있다. 새로 추가되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새로 필요하고, 그사이 더 늘어난 이해관계자 간 여러 의견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계획입지 제도 실행은 법적 근거 마련 이후 지구 지정,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을 거쳐야 하므로 입법을 늦추는 행위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해상풍력 보급을 또다시 몇 년 이상 미루는 행

위이다. 법이 적용돼 첫 입찰이 열리는 시점이 2020년대 후반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연할 시간이 없다. 이미 국내는 해상풍력 법제, 해양공간 법제 마련에 있어 유럽은 물론 일본, 호주, 대만보다 뒤쳐진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서 입법 기회를 놓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에너지 전환, 산업전환의 흐름에서 밀려나는 것이다.

최근 기후정치바람에서 발간한 2023 기후위기 국민 인식 조사 전국 보고서에 따르면,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인 울산, 전남, 부산은 각각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76.7%, 73.5%, 75.2%가 찬성했다. 지역유권자도 바라는 해상풍력이 입지 선점, 이해관계자 갈등 등 기존 문제를 반복하지 않고 보급되기 위해서도 해상풍력 법제 마련은 더 이상 미뤄선 안 되는 숙제다. 한편 26일 그린피스가 청년들과 함께 만든 정책제안서에도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 도입 내용이 포함됐다. 정치가 70% 이상이 찬성하는 기후유권자와 청년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공약이 아닌 21대 국회에서 해상풍력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21대 국회는 2020년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2021년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한 국회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기후변화 대응 순위는 세계 63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60위이며, 재생에너지 비중은 꼴찌를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해상풍력 계획입지 마련은 21대 국회에서 의지만 가지고 행동하면 이를 수 있는 변화이다. 다른 말로는 이마저도 하지 않고 임기를 종료한다면 기후위기 대응을 하겠다는 말의 의미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일 것이다.

2024년 3월 05일

기후변화청년단체, 기후솔루션, 빅웨이브, 턴테이블